

# 핵심 자원수입국 이란, 전략적 상황관리 절실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고려대 특임교수  
전 주 폴란드 대사



◎시아파 이란, 핵문제와 시위사태

지난 16일 UAE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UAE의 적”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는 듯하다. 지난해 9월 여성의 하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유희진압으로 6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시위 주동자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이슬람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및 서유럽이 이란의 핵개발을 적극 차단함에 따라 이란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이 1956년 원자력 협력협정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란은 1950년대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정이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개시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이란은 1967년 최초의 5메가와트(MW) 실험용 원자로를 비롯해 훈련용 장비와 원자력발전소 등을 갖추기 시작한다.

원자력 능력 자립을 위해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 등을 추진할 이란 원자력청을 1974년에 설치한다. 이어서, 1979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에 이은 미국 외교관 인질사건으로 미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적대관계로 돌

아선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도 중단된다. 이란은 주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미국의 압박으로 서유럽과의 원자력 협력이 어려워지자 이란은 파키스탄 및 중국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란은 ‘파키스탄 핵무기의 대부’로 불리는 칸(A.Q.Khan) 박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1987년부터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수입한다. 칸 박사는 이란을 비롯해 북한과 리비아 등과 확산망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불법적인 협력 채널을 통해 이란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핵무기 개발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Amad Project)’를 시행한다. 이는 무기급 핵물질의 확보와 핵무기 부품의 실험 및 독자적 핵무기의 제조를 포함한다. 이란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2002년 프랑스에 있던 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평의회’는 나탄츠 우라늄 농축 시설과 아라크 중수생산시설 등 이란 내의 미신고 핵시설을 폭로한다.

2006년 2월 이란 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이래 안보리는 총 6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한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과 제재’라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극력 저지하기 위해 핵미사일 과학자를 수시로 암살하고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하는 등 독자적인 선제 조치를 선호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란과의 외교협상에 돌입했다. 2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2015년 7월 역사적인 이란핵합의(JCPOA)가 채택된다. JCPOA는 이란의 원심분리시설 및 중수 관련 활동,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JCPOA는 붕괴되기에 이른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JCPOA에의 복귀를 선언하여 일단 불씨는 살려놓은 상태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 이란은 국내의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전개로 인해 JCPOA의 정상화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JCPOA가 이란의 핵개발 야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서 이의 파기를 부추긴다. 과거 북한과 이란, 이라크와 리비아는 대표적인 ‘확산세력’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 가다피가 제거된 이후 북한과 이란이 양대 확산세력으로 잔존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핵무기를 고도화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시아파의 중주국인 이란은 미국 이외 숙적인 이스라엘과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 등 지정학적 고려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정부를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상황이다. 이란이 유희진압 방식을 버리고 개인의 자유 특히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이란은 원유 등 핵심 자원 수입국이면서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이다. 대통령의 UAE 방문 중 불거진 ‘설화(舌禍)’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상이한 종교와 정치역학 등에 따른 대(對)이슬람 외교의 민감성을 감안,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상황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 社說

### 광주시·의회, 소통 통해 민생고 해결을

#### 작년 갈등 풀고 지혜 모아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지난해를 보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광역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도로 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 (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장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 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계묘년 새해를 맞아 양측이 화해하는 모양새다. 강시장은 3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해

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시와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제2회 광주전략회의를 갖고 예산 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월 조기 추경 편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모적 갈등을 풀고 소통의 폭을 넓히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복합경제 위기로 집약되는 올해, 광주의 경우 가뭄 심화에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경제가 최악이 될 것 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더욱 그렇다. ‘난방비 폭탄’ 등 민생위기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간혹 재정을 고집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삶이 날이 파랗해지고 있다. 하여 지방정부와 의회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시정과 의정의 주안점두고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가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인만큼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예산은 받으면서 감독은 받지 않겠다니

#### 불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친·인척을 고용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돈’과 관련된 비리도 드러났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이후 사립유치원의 일탈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A유치원장의 월급은 1216만원, B원장은 1032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9년까지 매월 492만원을 받았던 C원장의 월급은 지난해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년퇴직한 남편을 직원으로 들이고 조카를 채용해 거액을 지급한 유치원장도 있었다. 남편과 아들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유치원장의 일탈도 드러났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탓이 크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

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K-에듀파인을 구축했지만 사립유치원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4세대 지능형나이스 기반 조성은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이런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감시와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사립유치원 학교운영비로 유아 1인당 2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의 일부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광주에서 일부 유아무상교육도 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친·인척의 쌈짓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예산지원 여부를 떠나 법에 ‘사립학교’로 명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절차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전반을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은 교육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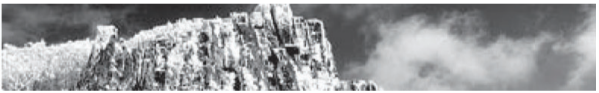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9일(현지시간) 중국 구이저우성 톈리현의 종파이 마을에서 열린 ‘타오위에’ 축제에 전통 의상을 입은 마오족 소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타오위에’는 ‘달빛 아래서 춤춘다’라는 뜻의 마오족 전통 새해맞이 행사로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행사이기도 하다. 종파이=신화/뉴시스

#### 서석대

선교사로서 처음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조선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다. 상석에 앉지 말고 반드시 하석에 앉으라고 주의시켰다. 후배 목사가 “상석이 어디냐”고 물으면, 이렇게 알려줬다고 한다. 부엌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방 위가 상석이고, 벽에 갖이 걸려있는 바로 아래가 상석이니, 그 반대편에 앉아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식 방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상석이 정해져 있다. 그 상석이 바로 ‘아랫목’이다. 아랫목은 방에서 가장 따스한 곳인



아궁이에서 장작 불을 때면 불기운이 방바닥 밑으로 난 통로(방고래)를 통해 퍼지도록 해 방바닥 전체를 덥히는 구조다. 고조선시대부터 사용돼 왔다고 전해진다. ‘개정판 옥스퍼드 사전’에 김치(Kimchi)와 함께 온돌(Ondol)이 실려있을 정도다. 온돌에선 다양한 문화가 파생됐다. 신발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관습, 청국장처럼 온돌의 열기로 발효한 식품, 가마솥에 탕을 끓여 먹는 식문화, 앉아 서 즐기는 놀이문화, 오늘의 찜질방 등이 온돌 문화다.

#### 온돌과 난방비

데, 상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구심점이다.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아랫목에 대한 추억이 많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어머니는 담요를 깔아놓은 아랫목에 자식의 언 손을 녹이며 온기를 불어줬다. 온 식구들이 모이는 곳도 아랫목 담요 밑이다. 발을 문고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고, 갓 구어낸 밤이나 고구마를 호호 불어 먹으며, 정을 나눴다.

이런 아랫목은 우리 교유의 주거 형태인 온돌(溫突)에만 있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 난방 장치다.

김선옥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규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69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기획특집부	(062)510-0331
경제부	(062)510-03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